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

임단협 지도지침 폐기하라

▶ 관련 기사 3면

세월호

진실 규명 운동은 계속된다 ... 8면

세월호 침몰 음모론 비판 ... 5면

유성기업 노동자 자살

노동자 탄압이 부른 죽음 ... 3면

국제

프랑스 노동개악 반대 학생시위

남아공의 새 노총 ... 7면

여성

총선 여성 공약 비교 ... 4면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교육재정 긴축에 맞선 파업을 지지하자

4월 1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다. 임금 차별과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 1백만 원, 일방적 전보와 직종통합 중단, 교육개악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대비 60퍼센트에 불과하고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정기상여금도 없다. 노동자들은 올해 정기상여금 1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자 교육감들은 약속했던 처우 개선조차 후퇴시키는 등 학교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은 더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고용 불안도 심각하다. 투쟁의 성과로 1년 이상 일한 상시·지속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만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된 직종들도 많다. 올해도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전문상담사 등의 직종에서 해고가 벌어져 노동자들이 투쟁을 벌였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2월 ‘학교회계 직원 처우 및 고용 개선 계획’을 통해 2018년부터 총액인건비 ‘산정인원’ 초과 교육청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정원 관리를 강화하고, “학생 수 감소 등 행정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확대”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르면 정원을 초과하는 인력 2~3만 명을 줄여야 한다. 기간제 노동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대상은 더욱 심각한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인력운용의 유연성 확대”는 강제 직종 통합과 전환 배치 강화로



임금 차별·고용 불안에 맞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월 1일 파업을 할 계획이다. 3월 26일 '총선투쟁 승리 범국민대회'.

이어질 것이다. 이미 곳곳에서 이런 공격이 자행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재정 긴축은 가장 열악한 처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까지 공격하면서 학교에서 차별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노동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이 책임져라”, “교육재정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40만 명

이번 파업은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자화자찬하는 것이 위선임을 보여 준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정규직화는커녕 비정규직도

별로 줄지 않았고, 차별도 여전히 심각하다. 공공부문 중 가장 비정규직이 많은 학교에는 기간제 교사를 포함해 비정규직 40만 명이 존재하고 노동자들은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그나마 무기계약직 전환이 늘고, 처우에서 약간의 진전이 있었던 것도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 덕이다. 특히,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3년간 파업 투쟁을 이어가며 1년 이상 상시 지속업무 무기계약직 전환, 장기근속 수당 쟁취, 명절휴가비 인상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7만여 명이 노조로 조직돼 투쟁하면서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불어넣었다. 지난 11월 민중총궐기에도 학교비정규

직 노동자 1만여 명이 서울에 모여 그 저력을 보여 준 바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회의)는 4월 1일 교육공무직본부 파업을 시작으로 6월에는 전국학비노조가 파업을 하고, 11월에는 학비연대회의 소속 3개 노조가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하는 상황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격에 결코 호락호락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 줄 수 있다.

또한 이번 파업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만큼 총선에서 노동자계급의 목소리를 높이고, 총선 이후에도 이어

질 노동개악 공격에 맞선 투쟁을 건설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도 이번 파업이 전체 비정규직 투쟁으로 확대·발전할 수 있게 연대하기로 결정했다. 전교조도 조합원들에게 파업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학교에서 부당한 압력에 함께 대응하라는 연대 지침을 내렸다.

지난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에서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우리 파업 대오에 민주노총의 다양한 조끼를 입은 노동자들이 모여 엄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의 재정 긴축 공격에 맞서 임금과 고용을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조명지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사진) 인터뷰

“투쟁으로 국회가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게 할 것입니다”

“학교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더 위험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한 만큼의 대우는 받지 못합니다. 정부는 우리를 정규직이라고 하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오래 일할 수록 임금 격차는 더 커지는 무기계약직입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과 교섭을 하고 있지만 지지부진합니다. 교육청이 예산 때문에 안된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최근 학교비정규직 인력 운용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중단, 초단시간, 강사직종 같은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직종의 심각한 고용 불안, 직종통합, 강제 전보를 통한 노동강도 강화를 낳을 것입니다.

임금 차별과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호봉제, 교육공무직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요구입니다. 이번 파업으로 이것을 다 이루기는 쉽지 않겠지만 적어도 올해 정기상여금 1백만원 만큼은 꼭 파내려고 합니다.



안명자

정규직들은 정기상여금을 받지만 비정규직은 못받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큼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합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재정을 학생수 기준이 아닌 공공 교육 강화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교육감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교육감들은 재정 부족을 모든 것의 핑계로 대서는 안 됩니다. 처음 교육청들은 급

식비조차 줄 수 없다고 했지만 우리는 투쟁으로 따냈습니다. 보수교육감이면 싸우고, 진보교육감이면 싸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와는 열 번 싸우고, 진보와는 아홉 번 싸워야 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둘 다 싸워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4월은 학교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새로 업무 분장을 하며 일이 폭탄처럼 쏟아지면서 학교비정규직의

노동강도도 가장 센 시기죠. 상대적인 박탈감도 더 크게 느낍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 바쁠 때 꼭 파업을 해야 한다는 압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요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 1일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가장 바쁘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의 존재 가치를 알릴 생각입니다.

장미꽃과 편지

또 4월 1일은 총선을 앞둔 시기입니다. 그간 우리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하다 보니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보교육감 시대를 만들기 위해 조직적으로 결의하고 행동했습니다. 교육공무직법안도 만들고 열심히 싸웠지만 정치인들의 관심은 다른 데에 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우리는 정계에 나가려는 이들에게 우리의 요구를 듣고 관심을 가지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선거 시기에 단지 누군가를 찍는 정치가 아

니라 투쟁으로 정치에 우리의 요구를 반영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난 세 차례의 파업을 하면서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습니다. 집회를 하고, 행진을 할 때 민주노총의 다른 조끼와 깃발이 있으면 큰 힘이 납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는 지지 부대는 ‘우리가 정당한 투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 줍니다.

특히, 학교에서 같이 일하는 전교조,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연대는 큰 힘을 줍니다. 예전에 한 학교에서 전교조 선생님이 우리 조합원들에게 장미꽃과 편지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파업에 나가는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는 편지와 꽃을 받고 파업에 나서기를 주저했던 조합원이 파업을 결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전교조 조합원의 장미 한 송이가 우리 조합원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을 보면서 전교조의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이번 파업에도 많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인터뷰·정리 조명지

총선 여성 정책 평가

새누리당, 노동 개악 +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박근혜 정부 들어 평범한 여성들의 삶은 더 나빠졌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 기초 속에서 “노동 개혁”을 밀어붙였다. 정부는 여성들에게 일도 하고 아이도 보라며 시간제 일자리를 대폭 늘렸다. ‘무상보육’을 약속한 박근혜는 재정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겼다. 해마다 반복된 보육 대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보육 교사들에게 돌아갔다. 노동자와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면 여성노동자들의 이중의 굴레를 더 강화해 온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질 좋은 정규직 일자리 확대와 여성노동자 차별 개선,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공약들은 이와는 정 반

대다. “노동개혁”을 적극 홍보할 뿐 아니라, 시간제 일자리도 더 확대하는 정책을 내놔다. 보육 공약도 실질적인 보육의 국가 책임은 빠져 있거나 생색내기 수준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데 혈안이 돼 있기도 하다. 새누리당이 ‘5대 핵심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마더센터’ 설립 공약도 육아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은 미미하고, 시간제 일자리만 늘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얼마 전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은 각 정당에 성평등 정책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는데, 여연이 요구한 과제들에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신 철화, 평균임금의 50퍼센트로 최저임금 인상, 상시지속 업무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국공립어린이집 30퍼센트로 확충,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여성의 삶을 개선할 좋은 요구들이 많았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답변 자체를 거부해, 차별받는 여성들의 처지 개선에는 아예 관심이 없음을 보여 줬다.

새누리당 여성 비례대표들의 면면을 봐도, 이런 점이 드러난다. 이들은 대부분 성공한 여성 기업인들, 정부의 친기업 정책을 옹호해 온 이들이다. 코레일 사장 최연희처럼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인 자나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김순례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들이 평범한 여성들의 삶을 이해할 리 없다.



시간제 일자리 등 박근혜 정부 정책 뒷받침하는 공약 내놓은 새누리당

더민주당, 새누리당보다는 낫지만 한계 명백

더민주당의 여성 노동, 보육 문제 관련 공약들은 새누리당과는 구별된다. 상시적 업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 최저임금 1만 원, 생활임금제, 공공 돌봄 서비스 일자리 확대와 처우 개선, 국공립어린이집 30퍼센트까지 단계적 확충,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더민주당은 NGO 여성 단체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왔는데, 여성 단체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인 듯하다. 그럼에도 여연이 요구한 핵심 과제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낙태) 허용은 제외됐다.

더민주당이 자신의 공약들을 얼마나 우선순위에 두고 진지하게 실현해

나갈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더민주당은 ‘노동개혁’ 문제에서도 당론으로 ‘노동개혁’ 5법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결국 비정규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쟁점법안을 놓고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후퇴했다. 이보다 더 후퇴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는 더민주당이 주되게 자본가 계급에 기반을 둔 친자본주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의 30퍼센트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위한 비용으로는 한 해 2천5백억 원만을 계획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의 30퍼센트까지 확대하려면 1만여 곳을 짓거나 전환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

면, 더민주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비용절감형’ 국공립어린이집 모델을 추진하려는 듯하다. 물론 이 모델이 민간어린이집보다야 나은 측면이 있지만, 위탁 운영에서 오는 문제점(여전히 보육의 질과 고용 조건이 낮은 문제, 위탁체 선정시 비리 문제) 등 한계도 명백하다.

계다가 최근 김종인을 영입해 전권을 쥐어 준 데서 보듯, 더민주당은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우클릭 해 왔다. 이런 정당이 일관되게 여성 노동자·서민의 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클릭 중인 더민주당

진보·좌파 정당들, 새누리당·더민주당보다 월등히 낫다

반면, 진보·좌파 정당들은 여성 노동자·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약을 제시했다. 가령, 정의당과 노동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노동운동의 요구들을 폭넓게 반영했다. 사회서비스 노동자나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도 주요 공약으로 포함되어 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누리과정 예산 국가 부담 등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도 강조하고 있다.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돌봄’을 강조하며 유급 육아휴직 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 아빠 육아휴직제 의무화도 제시했다. 녹색당의 여성 정책에도 핵심적이고 중요한 공약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민중연합당도 여성노동자 차별을 없애기 위한 여러 공약들을 제시했다.

노동당은 국공립보육시설을 2020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50퍼센

트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수를 기준으로 약 30퍼센트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는데, 노동당의 여성 관련 정책은 대체로 정의당의 것보다 더 폭넓고 급진적으로 보인다. 기본소득과 함께 아동돌봄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한 것도 노동당 공약의 특징이다.

정의당 공약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화와 피해자 유급 휴가·휴직 도입’ 공약이 눈에 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여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정의당과 노동당은 몰래카메라 촬영물 유포 사이트나 스토킹 범죄와 같은 신종 범죄 관련 조항을 법에 명시하고, 과도한 미용·성형 산업에 대한 규제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주 여성과 북한 이탈주민 여성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 것도 눈에 띈다.

정의당·노동당·녹색당이 모두 성

적 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한 것도 훌륭한 일이다. 앞서 말했듯, (새누리당은 물론) 더민주당은 이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물론 아쉬움이 남거나 한두 개 정도는 섀트 지지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가령, 낙태 허용을 “사회경제적 사유”로 제한한다거나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을 강화한다거나 성매매 비범죄화와 함께 성구매 남성 처벌도 요구한다거나 데이트 폭력에 대한 대응으로 ‘클리어법’(데이트 상대방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도입한다거나 하는 공약은 다소 지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정의당과 노동당 등 진보·좌파 정당들의 여성 공약은 새누리·더민주당보다 월등히 낫다.

이현주



여성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에 중요한 공약들을 제시한 진보·좌파 정당들

지난호 음모론 기사를 읽고 나서

더욱 가소로운 세월호 침몰 음모론

최일봉

지난호 <노동자 연대> 신문의 ‘음모론과 마르크스주의’ 기사에서 차승일 기자는 음모론이 마르크스주의와 아무 관계 없음을 논증했다. 음모론은 사회 구조를 계급으로 파악하는 마르크스주의와 본질적으로 다르게 보아, 극소수 엘리트가 사회를 운영하며 중요한 사건들을 은밀하게 일으키고 조종한다는 생각에 근거한다.

그리고 “음모론이 가정하는 세계는 ... 기계와 같다. 이 세계에서 ‘우연’이라는 요소는 발불일 곳이 없다. 그래야만 소수 엘리트의 비밀 조치가 바라는 결과가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배계급보다 그 내부의 극소수 ‘이너 서클’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해 이들에 관한 단편적 사실들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 ‘구체적’ 사실을 취사선택하면 음모론으로 기울기 십상이다.

그러한 사고에서 계급투쟁은 실종돼 있다.¹ 민중주의자 가운데 일부가 음모론에 친근감을 느낄 만한 까닭이다. 민중주의자 김어준이 이끄는 ‘프로젝트 부’는 김지영 감독이 만들고 있는 세월호 영화를 후원한다.

김지영 감독이 <파파이스>에 출연해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고 주장한 내용의 핵심은 ‘앵커(닻)’를 이용한 침몰’이다. 영화는 이 가설을 주제로 삼고 있다. 김지영 감독과 김어준은 왜 닻을 내리고 운항했는지는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 쉽게 음모론으로 연결된다.

전지윤도 그 음모론에 동의한다.² 그러나 세월호 재판 기록을 담은 책 <세월호를 기록하다>의 저자 오준호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렇게 김지영 감독을 비판했다. “앵커가 배를 붙잡는 힘인 파주력이 닻줄 길이에 비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닻줄 길이는 300미터보다 훨씬 길어야 했을 것[이다.] ... 김지영 감독이 말하는 것처럼 해서 지형도에 맞춰 배가 걸린다는 건 이상하다.”

파파이스

차승일 기자는 음모론자가 지역적인 ‘구체적 증거’에 집착한다고 지적한다. “음모론은 비밀 집단의 존재와 행위를 중요하게 보므로, 특별하거나 숨겨진 지식에 의존하고, 감춰진 사실을 들추는 데 치중한다.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항적도와 다른 항적도는 없는지, 레이더 영상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진 ‘괴물체’의 정체는 무엇인지 등을 알아내는 데에만 너무 큰 관심을 기울인다.”

구체적 증거와 구체적 사실에 대한 집착이 만약 편견과 결합되면, “그 과정에서 음모론은 자신의 가설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하곤 한다. 그래서 얼핏 보면 음모론은 아귀가 딱딱 맞는 듯하지만, 또 다른 증거와 정황을 함께 고려하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음모론을 증거를 둘러싸고 반박할 수는 없다. 음모론이 제기한 가설을 반박하는 증거는 (특히 공식적 설명과 비슷



영국영연방 저술처 제공

단편적 사실들을 취사 선택해 어떤 결론을 내는 음모론은 진정한 세월호 진실 찾기에 방해만 된다.

한 것이라면) 조작된 것으로 치부할 터이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음모론은 확증편향의 오류를 범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뉴스타파> 최기훈 기자는 이런 확증편향을 비판하며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한다. “세월호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는 박수를 보내줘야 한다. [그러나] 이번 파파이스를 보고 든 생각은 자신들이 세운 가설에 부합하는 사실만 취합해서 논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지고 더군다나 가정이나 추론을 은근슬쩍 사실인양 끼워 넣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의 설명은 음모론과 다르다. 지배자들이 이러저러한 음모를 꾸미는 것은 맞지만, 그들의 배후에 있는 ‘막후 인물들’의 음모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문제의 사건을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모순들이라는 맥락 속에 자리 잡게 할 때 그 진정한 본질을 알 수 있다. 차승일 기자는 그 모순을 이렇게 요약한다.

“지배계급은 경쟁적...자본축적...의 영향을 받는다. ... 국가는 자국 자본가들의 이익에 호의적으로 반응해 움직이고, 기업주들도 ... 국가 관료들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 ... 다른 한편, 지배계급은 ... 서로 분열하고 죽도록 경쟁한다. ... 그래서 ... 자본주의는 그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는 부정부적인 체제이다.”

<노동자 연대> 신문은 이런 근본적인 인식 틀 속에 세월호 참사를 자리매김 했다. 해운기업들의 이윤 경쟁, 신자유주의적 규제 폐지와 완화, 정부(지방정부 포함)와 기업의 부패한 유착, 특히 정부의 “영망진창 구조”(botched Sewol rescue: 2015년 2월 12일 CNN 보도의 제목) 등이 어우러져 빚어진 참사임을 논증했다.³

특히 정부의 대처가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었는데, 음모론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케 해 얻을 이익(이런 게 있는가 모르겠다)보다는 볼 손해가 훨씬 컸다는 점에 관해서는 속고를 하지 않는 듯하다.

차승일 기자에 따르면, 음모론의 근본적 원인은 자본주의적 소외이다. 소외 때문에 사람들은 모종의 알 수 없는 힘의 지배를 받는다고 느낀다.

차기자는 음모론과 관련해 이런 점도 지적했다. “음모론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강변하기 시작하면 운동을 분열시킬 수도 있다. 자신들에 대한 비판과 반박은 지배자들의 사주를 받은 것이거나 적어도 지배자들의 음모에 놓아나는 행태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⁴

1 Josh Lucker, ‘Class Struggle or Conspiracy?’, 12 October 2012, <http://www.marxist.com/class-struggle-or-conspiracy.htm>

2 전지윤은 1999년 서해교전 직후에도 음모론을 펴다가, 김하영이 제국주의론에 근거해 제기한 논박에 부딪혀 침묵했다. 이후로 그가 단체를 탈퇴하기까지 그는 종종 뒤돌아 자리에서 음모론을 시사해 다른 노동자연대 회원들을 웃기다가 우리가 정색을 하면 음모론을 집어넣었다. 그가 진보당 내 경선부정 사태를 서술하는 방식도 음모론적이었다. 그가 이렇게 음모론을 좋아하는 것이 그가 탈퇴 후 노동자연대를 모략하는 것과 어떤 관계 있는지 속고해 보는 것도 흥미있는 일이겠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3 김승주 외 3인의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들이 쓴 소책자는 세월호 참사를 자본 축적의 동역학 등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들 속에 자리매김 하고 고찰한다.

4 전지윤이 진보당 당권파의 당내경선 부정 여부로 나머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들과 충돌했을 때 그는 우리를 정의당 대변자들로 매도했다. 이명박 정부와 우파 언론의 음모에 어리석게(물론 의도치 않게) 놀아난 일이었던 것처럼 암시하기도 했다.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상

맑시즘2016

7월 21일(목)~24일(일)에 서울에서 열립니다

오늘날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70개 알짜 주제
차별과 천대, 착취에 반대하는 사상 토론
평등하고 공정한 청중 토론
따분하거나 현학적이지 않은 토론
헛되지 않은 가능성과 진실을 추구하는 토론



해외 연사 주디스 오어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이다. <여성차별과 자본주의>(노동자연대)와 <마르크스주의와 여성해방>(근간)의 저자이다. 영국의 대표적 반전 운동 연합체인 ‘전쟁을 중단하라’ 연합(Stop the War Coalition)의 운영위원이기도 하다.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

※ 이 밖에도 노동운동·사회운동 활동가, 진보·좌파 저술가들 수십 명이 맑시즘2016에서 연설할 것입니다. 연사와 주제가 웹사이트에 업데이트됩니다.

주최: 노동자연대

문의 : 02-2271-2395, marxism@marxism.or.kr

www.marxism.or.kr

※ 맑시즘은 16번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입니다.

전국집배노조(준) 출범

“민주노조 건설해 집배원 죽지 않는 현장 만들겠다”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전국집배원 투쟁본부’(이하 전국집배원투쟁본부)가 3월 25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전국집배노조(준)의 설립을 공식 선포했다.

4월 13일, 전국집배노조(준)(이하 집배노조(준)) 설립 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집배노조(준)는 현 전국우정노조 집행부 및 지방본부 위원장들 하에서는 “조합원의 권리 확보”가 어렵다고 보고 새롭게 노조를 결성하기로 결정했다. 현 집행부는 토요 택배 배달 재개를 직권조인하고, 노조 지도부 직선제 전환을 연이어 부결시키는 등 “언제나 돈만 생각하는 우정사업본부와의 관계를 먼저 고려”하면서 “내부 권력 투쟁에만 몰두”해 왔다.

특히 지난해 9월 우정사업본부가 우편사업의 적자를 줄이겠다며 토요 택배를 재개하려는 것을 노조 집행부가 합의해 준 것이 집배노조(준) 출범의 결정적 계기였다. 집배원들의 노동조건은 장시간·중노동으로 악명 높다. 이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은 OECD가 발표한 2014년 한국인 취업자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인 2천1백24시간보다 약 1천 시간 가량 더 많으며, OECD 평균보다 1.7배나 더 많다. 그런데도 노조 집행부는 토요 택배 부활을 반대하는 절절한 염원을 배신했다. 토요 택배가 부활된 지 6개월 만에 한 달 사이에 2명이 과로사로 쓰러져 순직했다.

집배노조(준) 활동가들이 지적했듯, “이는 명백한 타살”이며 장시간·중노동은 “노동자를 사지로 몰아 [우체국을] 죽음의 현장으로 만들고 있다”. 게다가 노동자들은 장시간 중노동에 대한 대가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 연가 보상비와 시간의 근무 수당 미지급은 집배노동자들에게 다반사다. 정부 기관이 앞장서 무보수 노동을 일삼아 온 것이다.

집배노조(준)을 결성한 우체국 노조



“장시간·중노동으로 악명 높은 집배 노동자들의 처지를 바꿀 것” 집배노조(준)의 출범을 응원한다.

의 민주와 활동가들은 이런 열악한 조건을 바꾸려고 2000년대 초반부터 부단히 노력해 왔다.

특히 2013년 말에 ‘집배원 장시간·중노동 없애기 운동본부’를 만들어 투쟁하며 집배원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만들었다. 2014년 토요 택배가 폐지된 데는 이런 운동이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

지난해에는 토요 택배 부활에 맞서 집행부의 배신에도 굴하지 않고 현장 노동자들 속에서 투쟁을 건설했다. 전국집배원투쟁본부는 전국을 순회하며 토요 택배 부활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고 현장 노동자들의 저항의 구심이 되려 노력했다.

그래서 민주와 활동가들은 사측의 악랄한 탄압과 비민주적 노조 집행부의 외면 속에 숨죽여 지내 왔던 현장 노동자들로부터 관심과 지지를 받아 왔다.

또 간선제로 노조 지도부를 선출하는 비민주적인 노조 규약을 민주화하기 위해 직선제 운동도 벌여 왔다.

현행 우정노조의 간선제 하에서는 현장 노동자들의 염원을 제대로 대변할 지도부를 선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간선제를 통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세력이 노조의 주요 직책을 장악하고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조

반면 많은 노동자들은 사측의 공격에 제대로 맞설 수 있는 민주적인 노조 지도부를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직선제 규약 개정은 번번이 대의원 대회에서 부결됐다.

최근 우정노조 집행부가 실시한 조합원 직선제 찬반 모바일 투표 결과, 조합원 43퍼센트 중 98퍼센트가 직선제를 찬성한데서 보듯 직선제에 대한 지지는 광범했다. 모바일 투표 직후 열

린 3월 24일 우정노조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 규약 개정은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지만, 규약 개정 요건인 3분의 2 찬성에는 미치지 못해 결국 부결됐다.

특히 현 우정노조 집행부가 직선제 규약 개정과 토요 택배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지도부로 등장했지만, 토요 택배 부활에 합의하는 심각한 배신을 저질러 우정노조를 지배해 온 기득권 세력과 별 다를 바 없음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집배원투쟁본부는 별도의 민주노조 설립을 추진한 것이다.

특히 전국집배노조(준)은 토요 택배 철회와 인력충원, 미지급 수당 정취, 그리고 앞으로 예고된 사측의 공격에 맞선 투쟁 건설을 핵심적인 과제로 삼고 있다.

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인력 감축과 유연 노동 강화 등 노동자들을 쥐어짜기 위한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계획

이다. 올해 우체국 창구망 축소 및 민간 위탁 확대, 조직·인력의 유연성 및 슬림화 강화, 수익성 중심의 성과체계 운영, 복리후생 축소 및 임금피크제의 정착 등 비용을 절감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공격들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우정사업본부의 계획에는 집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더 악화시킬 배달 구조 개편안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노동자들의 배달 면적이 늘어나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투쟁 구심

또한, 우편사업의 적자 감축을 위해 하반기에 국내 등기 수수료 및 국내·국제 기본 우편요금 인상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런 조치들은 노동조건 악화와 공공서비스 후퇴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 전국집배노조(준)은 주요 지역별 모임을 갖고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집배원이 중심이 돼 강력한 집배노조를 건설하고, 향후 우체국의 다른 직종 노동자들까지 참여하는 우체국민주노조로 확대해 나간다는 전망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건설된 민주노조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의 고통 전가 구조조정에 맞서 실질적이고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기를 기대한다.

전국집배노조가 앞으로도 현장 노동자들 속에서 가장 선진적인 투쟁 부대이자 저항의 구심 구실을 한다면, 그 속에서 아직 집배노조에 참가하지 못하는 광범한 노동자들의 지지와 동참을 끌어낼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 연대〉는 우체국 노동자들의 진정한 염원을 대변할 집배노조(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한다. 지금껏 그래 왔듯, 집배노조(준)의 투쟁과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윤필연·이정원

홈플러스노조, 노동자연대 등 3개 단체에 감사패 전달

3월 29일 홈플러스노조의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렸다. 대의원대회는 지난해 투쟁이 승리를 거둔 데 대한 노동자들의 자부심과 환호로 가득했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지난해 고용보장과 임금 인상을 위해 6개월 이상 투쟁을 벌이고, 두 차례 서울 상경 파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이 투쟁은 지난해 단연 돋보이는 비정규직 투쟁이었다. 노동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2016년을 마트 노동자 공동투쟁의 원년으로 만들자”며 올해 투쟁도 결의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지난해 투쟁에 연대했던 단체 중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약탈경제반대행동, 노동자연대 등 세 개 단체가 노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노조는

감사패에서 “귀 단체는 헌신적인 연대로 홈플러스 매각 투쟁 승리와 고용안정 정취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홈플러스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하고 썼다.

정당성

세 단체 모두 지난해 결성된 ‘홈플러스를 투기자본에 매각하지 마라 시민대책위’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기자회견, 토론회, 집회 등에 참가해 노동자들의 고용이 위협받는 현실을 폭로하고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이런 활동에 참가하면서 노동자연대 회원들도 자극을 받고 조합원들과 돈독해질 수 있었다. 영등포, 인천 등

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매장 홍보전을 벌인 것은 특히 인상적인 경험이었다.

노동자들은 “매장 선전전에 단체들이 와 주면 효과가 있다”며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와서 함께해 줘서 고맙다”며 거듭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일부 동지들은 “집회 때마다 지지 팻말을 만들어 온 단체”라며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기도 했다.

홈플러스노조가 앞장서 롯데마트 노동자들을 민주노총으로 조직하기 위한 캠페인에 함께했던 경험도 기억에 남는다.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기쁨과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준 홈플러스 조합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조명지



3월 29일 열린 홈플러스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민변 노동위, 약탈경제반대행동, 노동자연대가 감사패를 받았다.

프랑스

대학생들 노동법 개악 맞서 투쟁하다

3월 24일은 악랄한 노동법 개악에 맞선 세 번째 전국 행동의 날이었다.

임시국무회의에서 노동법 개악을 논의하는 동안 몇 개 도시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경찰이 이번에도 또 폭력을 휘둘렀지만 시위를 막지는 못했다.

파리 거리 시위에서는 몸싸움이 있었다. 경찰이 15세 학생을 구타하는 영상이 찍혔다. 경찰이 그 학생의 턱을 부러뜨렸다는 보도가 있었다. 같은 학교의 학생인 마농은 기자들에게 경찰이 그 학생을 “개처럼” 다뤘다고 말했다.

“저는 이제껏 그렇게 끔찍한 장면은 본 적이 없어요.” 마농은 덧붙였다. “한 경찰관은 우리에게 ‘입 닥쳐’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결국, 노동법 개악안을 추진하는 노동부 장관 미리암 엘 코르리조차 “경찰이 대학생들을 대하는 데 적절치 않은 행동”이 있었다고 인정해야 했다.

앞서 파리, 리옹, 스트라스부르에서는 경찰들이 대학교로 난입해 학생들을 공격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이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24일 시위를 앞두고 더 많은 대학에 바리케이드를 쳤고 여러 곳에서 새로 점거에 들어갔다. 앞선 22일에도 많은 곳에서 가두 행진이 있었다. 서쪽 지역 렌에서는 행진하는 학생들이 철도 노선을 가로막기도 했다.

24일 시위에는 많은 노동자들도 참

가했다. 공공부문에서 턱없이 낮은 임금 인상안이 발표된 이후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노동조합총동맹(CGT) 소속 노동자들이 특히 많았다.

대다수

현 중도좌파 사회당 정부는 사장들이 임금은 덜 주면서 더 오래 일을 시킬 수 있게 하고자 한다. 그러나 많은 노동조합뿐 아니라 인구 대다수가 이 노동법 개악안을 반대한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과 장관들은 개악안의 본질은 바꾸지 않은 채 우파 노동조합들을 설득할 만큼만 법안을 수정했다. 그 결과 주요 노총인 프랑스 민주노동자총연맹(CFDT)는 이 수정된 개악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장들은 이조차도 지나친 양보라고 말한다. 프랑스경제인연합회 메데프(Medef)는 수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한다.

사장들이 특히 되살리고 싶은 개악 내용은 부당해고 시 지급하도록 돼 있는 보상금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그러나 CFDT는 이 조항을 매우 끌려러워 하고 만약 이 내용이 다시 개악안에 포함되면 법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장들은 프랑스 노동자들이 어렵게 얻어낸 고용의 권리를 몹시 싫어해 그 권리들을 없애고 싶어 했다. 사장들은 새 노동법이 일자

리를 만들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윤을 위한 것이다.

학생들은 노동시간을 줄이면 과로와 실업 모두를 해결하면서 소득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학생들을 우습게 보며 도발하고 있다. 특히 총리 마누엘 발스는 학생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발스는 최근의 한 인터뷰에서 학생 시위대의 말을 차용해 자신도 “불안정한” 계약의 “임시직”이라며 조롱했다. 19일 농업 박람회에서는 한 여성이 “우리는 노동법 개악안을 원하지 않는다”고 소리치자, 발스는 능글맞게 웃으며 “상관없어, 그래도 받아들여야 할 거야” 하고 말했다.

그런 허세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다가오는 4월은, 학생들이 최초고용법(CPE)에 맞서 싸워 법을 폐지시킨 지 10년이 되는 달이다. 당시 학생들의 투쟁 때문에 정부는 이미 의회를 통과한 법을 폐지하는 수모를 겪었다.

기층 학생들을 대중 집회로 조직하면서, 학생들은 굳건히 버티고 있다.

다가오는 31일의 시위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날 학생들의 시위와 함께, 노동법 개악안을 반대하는 모든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데ιβ 수엘

출처 :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496호 / 번역 최재필



사진 출처 Force Ouvrière (틀라가)

“밤은 노동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기 위한 것” 청년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남아공 코사투 위기

최대 노조인 금속노조가 새 노총 건설을 선언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금속노조가 코사투(COSATU)와 경쟁할 새 노총을 다가오는 노동절(5월 1일)에 출범시키겠다고 지난 2월 초에 선언했다.

남아공에서는 1994년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해체 이후 아프리카민족회의(ANC), 남아공공산당, 코사투로 구성된 삼각동맹이 권력을 쥐고 있다.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해체로 흑인들은 정치적 자유를 얻었지만, 삼각동맹이 추진한 신자유주의로 인해 많은 흑인들이 여전히 비참한 조건에서 살고 있다.

2012년 마리카나 광산에서 경찰이

발포해 파업 노동자 30여 명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지자, 삼각동맹에 대한 기층 노동자들의 반발이 터져 나왔다. 당시 코사투에 속한 광원노조(NUM)가 ANC와의 관계를 의식해 파업 노동자를 비난한 것은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마리카나 학살을 계기로 코사투 안에서는 ANC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좌파적 요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다. 조합원이 30만 명이 넘는 금속노조(NUMSA, 광원노조 약화로 현재 최대 노조)가 조직적으로 이를 요구했다.

2014년 말, 코사투 지도부는 금속노조

를 제명하는 것으로 응했다. 당시 코사투 산하의 다른 8개 노조는 금속노조 제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후 금속노조는 광범한 사회 단체들과 함께 ANC를 대체할 좌파적 노동자 정당 건설을 추진해 왔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ANC와 경쟁할 후보들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새로운 노총 건설은 이런 움직임의 연장선 상에 있고, 금속노조, 식품노조(FAWU)를 비롯해 약 6개 노조가 그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김중환

알파고와 환원론

최일봉

알파고 과대선전으로 언론이 도배될 때 한 평론가는 이렇게 논평했다.'

“인간의 두뇌 신경망을 모델로 삼아 정교하게 설계된 인공지능이 인간의 사고 과정을 따라잡고, 부분적으로 능가하게 된 상황은 유물론적 세계관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듯하다. [기계적이지 않은] 유물론은 의식과 정신을 고도로 조직된 물질에 기반해 인간과 사회의 유기적 상호작용 속에서 발전하는 것으로 여겨왔다.

“그런데, 이제 고도로 집적된 인공신경망은 계산, 응용을 넘어서 인간의 직관까지 흉내내기 시작했다. 이제 체스나 바둑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그것이 결합되면서 범용화되고 로봇기술과 결합될 수 있다. 그러면 단순 반복 작업과 노동만이 아니라 숙련 노동, 지식노동, 서비스노동에서까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예측은 틀리지 않아 보인다.”

“구글은 ‘감정적 동요, 두려움도 없고 포기하지 않는’ 게 알파고의 장점이라고 했다. 여기에다가 엄청난 빅데이터에 입각한 확률·통계적 판단의 속도와 정확성은 갈수록 누구도 알파고를 이기기 어렵게 될 것이다. 1초에 수십만 개나 찾아내는 온갖 경우의 수에 대한 평가에 기반한 것일테니 말이다.”

과대선전

그에게 미안하지만, 언론의 뺑뺑이에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 인공지능에 관한 과대선전은 제2차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² 그리고 1980년대 레이건의 스태워즈 계획 발표 때 또다시 기승을 부렸다. 그리고 그때 이래 과학 학술토론회의 단골 메뉴이다시피 했다. 군사 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거니와, 대기업들로부터 가장 많은 재정 지원을 받는 연구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컴퓨터는 인간처럼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바둑도 연산(형식논리)의 일종이라는 점이다. 연산으로 말하면, 이미 오래 전에 컴퓨터는 인간을 능가했다. 그리고 인간 지능은 연산이나 정보 가공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아무리 기계가 학습 능력을 배웠어도 창조력이나 공감능력, 직관 등 다른 많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다 포괄할 수는 없다. 인간의 뇌는 불확정적이어서, 엄격한 결정론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무엇보다 인간 뇌의 복잡성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³ 인간 뇌에는 1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각각의 세포는 평균 1천 개의 다른 세포와 접속돼 있다. 그러면 10¹⁵ 개 접속이 있는 셈이다. 이 모든 접속이 전기자극을 교환한다. 지금까지 이런 수준의 회로망에 도달한 컴퓨터는 없다. 그러나 인간 뇌는 초거대 회로판 이상의 것이다. 게다가 신경세포들 자체의 구조도 무시할 수 없다. 그 구조는 디엔에이

에 코드화돼 있지만 개인 체험의 영향도 크게 받는다. 인간 뇌는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한 생명체들이 서로 만나서 영향을 주고받는 접촉점이다. 이를 통해 인간은 인간 고유의 특성인 자의식 소유와 의견 교환을 한다. 지금으로선 이 복잡한 메커니즘을 인간이 알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계가 흉내 내게 만드는 것도 언감생심이다.

인간의 또 다른 특성인 언어도 인간 고유의 특성이다. 특히, 인간의 지성을 형성하는 데서 언어가 하는 핵심적 구실을 깨달아야 한다.⁴ 나는 거의 40년 전쯤 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했는데, 그 분야의 양대 산맥인 소쉬르트 촘스키든 동물이 인간 수준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지난 40년 새 동물이 이 수준으로 진화했을 리는 만무하므로 소쉬르(1913년 사망)의 제자들이나 촘스키 자신이 견해를 바꿨을 리는 없을 것이다.

언어

언어는 뇌 내부에 있는, 의식의 물질적 토대다.⁵ 인간은 언어를 통해 협동을 하고, 복잡한 사상을 교환하고, 특히 자의식적 인식을 공유한다. 이런 능력과 활동을 협동적으로 공유한 덕분에 인간은 자연계에 작용을 가할 수 있었고, 여러 종 가운데 가장 성공적으로 자연에 적응하거나 자연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대략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전부터 6천 년 전 사이에 계급(즉, 착취)이 생겨나고, 곧이어 차별과 천대, 억압이 함께 생겨났다. 그랬어도 인간적 특질로서 협동이 사라진 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엔 협동심과 경쟁심이 공존한다. 만약 조직을 건설해 함께 싸우고 또 조직한다면 협동심을 더욱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인간 지성을 컴퓨터(아무리 슈퍼컴일지라도)에 비견한다는 건 환원론이다. 그것도 조야하기 이를 데 없는 환원론이다.

그런데 이 환원론은 마르크스가 말한 소외와 큰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제 불능의 상황이 인간을 압도하는 나머지, 인간의 노동생산물인 기계가 마침내 인간을 지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상상까지 출현하게 된 것이다.

이는 또한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말한 물신숭배와도 연관돼 있다.

- 1 전지윤, 변혁재정전 블로그에서.
- 2 시어도어 로작, 《정보의 숭배》, 현대미학사, 2005.
- 3 John Parrington,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as close as its fans make out’, Socialist Worker 2431(25 November 2014). 존 패링턴은 영국 웨스턴대학교 세포·분자약리학 부교수이다.
- 4 John Lyons, Introduction to Theoretical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8.
- 5 데릭 비커턴, 《언어와 행동》, 한국문화사, 1996.



김미영 기자

“아무리 힘들다한들 2년 전 그날 우리 아이들의 고통보다 크겠습니까?” 3월 28일 특조위 2차 청문회에 참석해 눈물을 흘리는 유가족들. 지난 2년간 자식 잃은 비통함에도 진실 규명을 위한 걸음을 멈춘 적이 없는 유가족들은 이 운동의 구심이 돼 왔다.

다가오는 세월호 참사 2주기

‘세월호 지우기’에 맞서 진실 규명 운동은 계속된다

김지윤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안타깝게도 3백4명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참사의 진상과 책임은 아직도 충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국가 기관들의 무시와 비협조 탓에 열악한 상황에서 조사가 이뤄져 침몰 원인 등에 대해 분명하게 규명되지는 못했지만 진상 규명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정부의 집요한 방해와 활동 종료 압박 속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2차 청문회가 3월 28일부터 이틀간 열렸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침몰 원인을 적극 규명하기 위해 청해진해운과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집중 신문이 이뤄졌다. 청문회 시작 전 4·16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은 “청문회는 ... 국가의 책임을 온전히 묻기 위한 자리”라고 의의를 밝혔다.

새로운 주장도 제기됐다. 청문회 사전 조사에서 세월호 여객영업부 직원인 강해성은 “대기하라”는 선내 방송이 청해진해운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새로운 증언을 했다. 그리고 조타수 조준기도 유사한 주장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청문회를 통해 2014년 2월에 조타기가 고장났는데도 수리하지 않고 운항을 계속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제주 교통관제센터(VTS) 교신 기록과 정부가 제출한 세월호 항적도의 편집 의혹도 제기됐다. 그래서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이런 조작된 증거를 사실로 인정하고 검찰이 조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하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근본적으로 다시 조사하고 재판을 해야” 하고 “특별검사제(특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실을 침몰시키려 한다

그간 검찰의 조사가 부실했음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 만큼, 유가족들이 특검 실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2014년 정부와 새누리당은 독립된 진상 규명 기구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줄 수 없다며 유가족들에게 특검 수용을 압박해 놓고, 막상 특검 실시를 요구하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유가족들이 삭발도 불사하며 국회 앞 80시간 농성도 벌였지만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은 19대 국회는 특조위의 특검안을 의결하지 않고 정기 회기를 마쳤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6월 30일에 특조위를 문 닫게 할 계획이다. 특조위에 예산이 편성돼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 게 사실상 지난해 9월이고 특별법이 보장한 활동 기간이 1년 6개월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월 1일이 활동 개시일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미 올해 예산과 인력 편성도가 일정에 맞춰 끝마쳤다. 이렇게 되면

세월호가 인양되는 시점에 특조위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정부의 공격에 맞서 4·16연대와 유가족들은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명 운동을 조직해 특조위 조사기간 보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이다.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은 유가족들의 오랜 요구이지만, 정부는 유가족들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고서 인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인양 시기를 저울질하는 동안 희생자 가족들의 가슴은 문드러지고 있다. 미수습자들을 찾고,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세월호는 온전히 인양돼야 한다.

정치적 초점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은 지난 2년간 술한 방해와 공격에 시달렸다. 유가족들이 겪은 수모를 떠올려 보라. 뿐만 아니라 세월호국민대책회의의 주요 활동가들이 소환됐고, 박래군 공동 운영위원장은 수감이 되기도 했다. 이 운동이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정부의 공격이 더욱 집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우파의 진실 덮기 공격 못지 않게 거의 국민적이라 할 만큼의 공분도 존재했다. 안전보다 이윤을 내세우고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로 기

업들의 돈벌이를 위한 길을 닦아온 것이 참사의 배경으로 지목되면서 대중적 분노가 확대됐다. 그 분노는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

유가족들은 굳건하게 운동의 구심을 형성했다. 유가족들은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원칙 있게 싸우려 노력했다. 올해에도 유가족들은 더는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며 특조위 활동 보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특검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서명 운동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를 방문해 간담회와 강연회 등을 통해 운동의 정당성을 알리고 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이 호소가 광범한 공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진보·좌파 세력들이 적극 노력해야 한다.

특히 올해 4·13총선과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맞물리면서 세월호 참사 쟁점이 정치적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선거 시기에는 노동자 대중 사이에서 정치적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사회적 쟁점들이 정치화된다. 진보·좌파 정당들이 선거 운동을 연단으로 삼아 정부의 진실 은폐 시도를 적극 폭로하며 정치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운동에 대한 지지를 모으려 노력한다면 세월호 진실 규명 운동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박근혜 정부의 본질을 극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은 정부를 향한 불만을 결집·대변

하는 구실을 할 가능성도 있다.

4·16연대와 유가족들은 2주기 이후에도 특조위 종료 시도에 맞서 특별법 개정과 특검 실시를 요구하며 싸울 것이다. 따라서 4월 9일 2주기 콘서트와 16일 범국민 촛불문화제가 큰 규모로 치러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 운동의 견재함을 확인시키고 운동 지지·참가자들의 자신감을 높여 특별법 개정을 위한 앞으로의 투쟁이 커다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 4월 16일 2주기 집회 이후에도 진실 규명을 위한 투쟁이 계속되고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운동이 세월호 운동의 성장·발전에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함께 참가합시다!

4·16세월호 참사 2주기 특별 콘서트 <약속콘서트>

일시 : 4월 9일 오후 7시
장소 : 서울시청광장(추후 장소 변경 가능)
주최 : 4·16연대 / 4·16가족협의회

4·16참사 2년 범국민 촛불문화제

일시 : 4월 16일 오후 7시
장소 : 서울(추후 공지)
주최 : 4·16연대 / 4·16가족협의회

세월호 참사 2주기 준비위원회 됩시다.

참가 방법 : <http://416act.net/notice/12102>
준비위원 가입비는 2주기 사업과 신문광고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